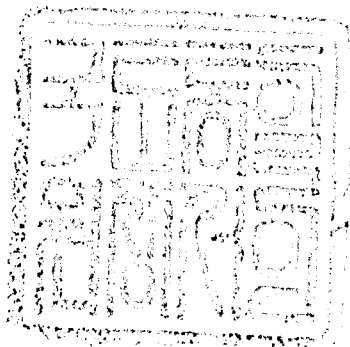

『7·7특별선언』 1년 통일정책 보고

1989



국 토 통 일 원

머리말

1988년 7월7일 노태우 대통령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여 남북한관계와 북방 외교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하겠다는 정책의지에서 『7·7특별선언』이라는 제6공화국의 통일외교 정책의 기본방향을 천명하였습니다.

이같은 내외환경을 배경으로 천명된 『7·7특별선언』은 분단 40년간의 남북관계의 대결구조를 지양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놓아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판단에서 그동안 우리가 쌓아올린 국력의 상대적 여유를 기초로 남북대화와 통일문제에서 선제적 양보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7·7특별선언』에서 보여준 우리들의 선제적 양보가 남북관계에서 어떤 상황변화를 가져왔으며, 교착된 남북대화를 타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북한의 변화를 유도했느냐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하에서 남북간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7·7특별선언』과 같은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임에 틀림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7·7특별선언』을 국민적 여망을 집약한 『국민선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정부가 이와같이 대북포용적인 정책자세를 표명했다하더라도 남북 대화창구를 주관해야하는 정부고유의 책임과 권능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제쳐놓고 대북접촉을 하겠다는 일부 단체와 인사들이 상존하는 현실은 『7·7 특별선언』의 참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우기 이같은 무분별하고 독단적인 행위가 결과적으로 남북대화과 교류의 질서를 문란시키고 북한의 혁명전략을 고무시킴으로써 이미 열려있는 대화의 진행까지도 위축시킬 소지까지 있어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7·7특별선언』은 중·소등 공산국가를 비롯한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각자의 정치적·이념적 입장을 접어두고 88서울올림픽에 대거 참여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그로인하여 우리의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나아가서는 국민적 자신감이 드높아진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7·7특별선언』은 역사와 국제정세의 흐름속에서 북한도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를 보이지 않을 수 없다는 당위성에 기초하여 그들의 대남자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우리측의 적극적인 조치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상응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측의 선제적 양보에 의한 『7·7특별선언』의 구현도 적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현시점에서 남북관계가 담보상태에 있다면 이는 북한이 『7·7특별선언』의 참뜻을 왜곡·거부하고 아직도 구태의연한 대남교란전략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북한의 부정적 태도도 민족의 여망과 시대의 흐름을 끝까지 역행시킬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7·7특별선언』으로 비롯된 우리의 노력은 인내와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자는 『7·7특별선언』 1년을 회고하면서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과 결과를 솔직하게 평가하는 자세로 국민에게 드리는 보고서입니다.

아울러 이 책자는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와 민족자존 그리고 통일번영의 새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정부의 정책추진을 더욱 밀어주고 이해와 참여를 더 해줄것을 바라면서 쓰여졌음을 밝혀드립니다.

1989년 7월 7일

국토통일원 장관 이 홍 구

목 차

머리말

1. 『7·7 특별선언』의 배경과 의의	9
가. 선언의 배경	9
나. 선언의 내용과 취지	13
다. 선언의 의의	20
2. 『7·7 특별선언』의 후속 실천조치	30
가. 대내적 조치	31
나. 대북제의	48
3. 새 통일방안 정립을 위한 노력	60
가. 새 통일방안 정립의 필요성 제기	60
나.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활동	64
다. 여론의 방향과 방안의 골격	67

1. 『7·7특별선언』의 배경과 의의

가. 선언의 배경

변화된 정세와 새로운 구상

제 6 공화국이 출범한 시기는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동·서진영이 과연 서울에서 만날 수 있겠는가 하는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던 때였다. 아울러 미·소간의 중거리핵무기 군축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질만큼 「신데짱트」무드가 무르익어 가던 시기였다. 30년간을 적대해오던 중·소도 화해일로를 치달아 중·소정상회담이 예상되던 시기였다. 즉 온 세계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었고 문화와 역사가 다른 민족사이에서도 과감한 개방과 교류의 새물결이 넘쳐흐르고 있었으며, 그 물결이 만나는 지점이 서울로 지정되어 있었던 시점에 제 6 공화국이 출범을 했던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올림픽을 앞두고 국민적 자신감과 자긍심이 극대화되고 있었다. 특히 그동안 남북대결의 상황하에서도 국력의 증대로 올림픽까지 치룰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국민들은 매사에 여유를 되찾게 되었던 것이다. 제13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통일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선거과정에서 어느 누구가 주도해서 그리된 것이 아니고 사는데 여유가 생기다 보니 국민각자가 자기의 주체성을 확인 하고자 하는 정신적 여유도 생겼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삶에 쫓기던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비로소 친척·친구를 그리워하고 찾아나서는 것에 비유될 수 있는 것이다.

주변정세와 우리사회내부의 상황이 이러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조차 북한은 변하지 않고 있었다. 중·소가 체제존속을 위해 개혁과 개방을 서두르고 있는데도 ‘우리식대로 살자’는 <주체>만을 강조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문을 더 꼭꼭 걸어 잠근채 남한의 혁명가능성에 온 기대를 걸고 국력을 낭비하고 있었다. 교조적인 대남전략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전술적인 차원에서 대남 선전·선동공세만 전개하려했다. 사회일각에서 일고있던 민중통일론에 고무되어 월맹이 월남을 공산화시킨 사례를 한반도에 적용해보려는 시도도 그치지 않았다.

정치지도자에게는 국민적 여망을 현실로 구현시켜줄 책무가 있다. 적어도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삼는 체제 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때 대내외 정세 여건은 제약요인이 되기도 하고 촉진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치지도자로서는 정세를 판단하고 그 정세를 유리하게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가 남북한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에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국민들이 여유를 가지고 바깥세상을 대할만큼 자신감에 부풀어 있는 상황에서 정치지도자가 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길 하나 뿐이다.

『7·7 특별선언』은 이러한 환경과 당위속에서 나온 것이다. 다만 환경을 이용하여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데 있어서도 생각은 깊이해야 한다. 과거의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구상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반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북한에 대하여 화해·화합·교류·협력을 역설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사실상 경쟁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어떤 부문에서는 적대적 경쟁관계를 또 어떤부문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전제로 한 것이었지만,

아무튼 경쟁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꾸려나갈 동반자관계를 전제로한 것은 아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또한 국제정세와 통일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통일대화를 주도한다는 점에서도 기왕에는 냉전체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민족자존적 입장이 그리 뚜렷하게 부각되지 못했다는 것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점에서 볼때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2월25일 취임사에서 “민족자존의 시대에 부응하여 대화하며 공존하고 협력함으로써 휴전선에도 화해의 봄을 가져와 멀지 않은 장래에 함께 통일의 열매를 거두자”고 북한측에 제의한 것이나, 1988년4월21일 취임후 첫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임기를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는 시대로 삼겠다”고 밝힌 것, 그리고 1988년5월28일 야당총재들과의 청와대 회담에서 “민족이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이룩한다는 입장에서 통일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한 것 등은 이러한 정책상의 반성과 새로운 구상을 내포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나. 선언의 내용과 취지

선언의 정신과 원칙

1988년7월7일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한관계와 북방외교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룩하겠다는 의지와 비전을 담은 제6 공화국 통일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을 특별선언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특별선언의 앞부분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분단은 우리민족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나 민족통합은 우리의 책임아래 우리의 자주역량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세계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고 문화와 역사가 다른 민족사이에도 과감한 개방과 교류의 새물결이 넘쳐 흐르고 있는 이 시기를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역사적인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으로 갈라진 겨레가 분단의 그날부터 오늘까지 서로가 서로를 불신 비방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고통스런 분단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과 북이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을 등진 채 서로를 대결의 상대로 여겨 적대관계를 격화시켜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시

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민족구성원 전체가 공동체 인식을 바탕으로 대결의 관계를 지양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민족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원칙으로서 자주·평화·민주·복지의 4개원칙을 제시하였다. 4개원칙의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주원칙 : 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하기로 하고 남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개방과 협력에 동참하면서 민족적 권익을 추구해 나간다. 북한도 「7·4남북공동성명」 3대원칙의 하나인 <자주>를 자주 거론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미군철수의 뜻으로 쓰고 있다.

둘째, 평화원칙 : 남북한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휴전이후 지금까지 추구되어온 「상호억지 차원의 평화」로부터 탈피하여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바탕으로 통일지향적인 남북한 관계를 수립해 나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평화개념」으로 전환한다. 북한은 3대원칙의 하나인 <평화>를 연공·연북통일의 뜻으로 쓰고 있다.

셋째, 민주원칙 : 민족성원 전체의 자유의사에 따라 민족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며 이를 위해 특정계급이나 소수계층의 독점적 이익추구를 배제한다. 북한이 3대원칙의 하나로서 내거는 <민족대단결>은 남북의 특정계급들만의 단결을 뜻하고 있다.

네째, 복지원칙 :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인 남북한의 주민은 물론 해외동포까지 포함하는 민족복지의 향상을 추구하고, 특히 북한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 북한은 통일원칙으로서 복지원칙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6개항 정책의 내용

자주·평화·민주·복지원칙에 입각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것임을 약속한 노태우 대통령은 그 실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6개항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하였다.

- (1)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 (2)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간에 생사, 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 지원한다.
- (3) 남북한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한 교역을 민족 내부교역으로 간주한다.

-
- (4)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 (5)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 대결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 (6)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

6개항 정책의 취지

남북한 동포간의 적극적인 상호교류추진을 선언한 제 1항의 전반부는 분단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남과 북이 하나의 뿌리를 지닌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서로간에 불신을 누적시켜온 데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서로 같은 민족으로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공동체의식을 키워나가겠다는 정책의지

를 담은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각계각층 인사의 인적교류문제를 협의할 것을 북한측에 촉구해왔고, 이를 위한 정부당국의 교섭과 보장을 위해서도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제의해 왔다는 점에서는 기존정책과 맥을 같이하면서도, 민족공동체의식을 발전시키자는 뜻이 첨가된 것은 새로운 것이다.

해외동포의 남북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을 선언한 제1항의 후반부는 그간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남북의 첨예한 대치상태로 인하여 해외동포들 사이에서조차 상호불신과 단절이 생겼고 이로 말미암아 해외동포들의 북한방문의 길이 사실상 막혀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민족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같은 민족으로서 그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로서는 공산권 거주동포와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방한을 이미 허용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면 남북한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을 적극 주선할 것을 선언한 제2항은 1천만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대변한 것이다. 기왕의 정부입장이 재강조되었다

는 점에서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민족 공동체의식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되는 바가 큰 것이다.

남북한 교역의 문호개방을 선언한 제 3 항은 과거의 물자교역과 경제협력 추진 제의와는 차원을 약간 달리하고 있다. 같은 민족끼리 상부상조 한다는 점에서는 과거의 제의와 맥을 같이하지만, 민족공동체 의식의 발전을 지향하는 『7·7 특별선언』에서는 새로운 의미가 첨가되었다. 즉 남북한간의 관계를 독립된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인식하여 남북한간의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함으로써 북한 의 항구에서 선적된 물자에 대해서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는 경제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민족경제의 규모와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조항인 것이다.

우방국과 북한간의 비군사적 물자교역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제 4 항은 민족공동체의 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한단계 높이고 아울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정책의지의 표현이다. 과거의 대결논리를 벗어난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북한주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며, 북한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키고 개방을 촉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민족공동체 형성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다.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간의 자유접촉과 협력을 희망한 제5항은 경쟁외교 대결외교를 지양하고 민족의 자존과 위신을 되찾아 나가면서 민족이익을 넓혀 나가자는 것이다.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타민족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경제발전과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때문에 국제적인 선망과 찬사를 받는 「세계속의 한국인」인 우리가 북한을 포용하고 협력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한민족의 공동이익을 극대화하는 외교를 펴 나갈수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유엔이나 비동맹 등 국제무대에서 외교대결을 그만두고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과 이사국 진출을 도와주거나 남북한의 대표가 세계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만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민족자존의 토대위에서 화해와 개방의 세계적 조류에 남북한이 동참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 우리의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한 제6항은 기왕의 통일·외교정책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북방외교를 추진하면서도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라는 시각에서 미·일 등 우방국가

들의 대북한 접근을 저지하고자 했던 것이 기왕의 통일·외교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을 「국제사회에서의 동반자」로 보고자 하는 민족공동체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취지는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화해움직임을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능동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자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남북한 공동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7·7 특별선언』은 남북한간의 단절과 대치의 현실을 극복하고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고, 그런만큼 북한측의 적극적인 호응이 뒤따라야만 실효를 거둘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은 북한측이 긍정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6개항 보다 더 전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다. 선언의 의의

『7·7 특별선언』은 남북이 비록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고 있으나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공동체의식에서 출발, 북한동포도 민족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그런 토대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남북한간의 긴

장완화와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자는 뜻을 담고 있는만큼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또한 이 선언은 이제까지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므로써 우리의 대북우위를 굳히고 그 토대위에서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려했던 통일·외교정책을 지양하는 대신 국민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사회의 개방과 발전을 유도하는 등 북한을 민족공동체형성의 동반자로 삼는 「통일·외교정책 기조의 전환」을 약속한 것이다.

이와같이 북한에 대한 인식과 통일·외교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선언했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하기를 기다리기 보다 우리가 먼저 변화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정책방향을 천명했다는 점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전환

『7·7 특별선언』은 북한을 경쟁·대결·적대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민족의 일부로 포용하고, 상호신뢰·화해·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대북한관에 있어서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남북한이 상호단절과 불신속에 민족자해행위를 지속한다면 민족역량의 낭비는 물론이고 민족자존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이제 남과 북은 한겨레, 한역사, 한문화를 가진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과거에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남북한이 상호불신·비방하고 국제사회에서 서로 헐뜯고 다투는데 골몰한다면 이는 우리의 발전수준, 성숙한 국민의식, 올림픽을 치룬 국민의 자긍심에도 걸맞지 않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7·7 특별선언』의 근본취지는 하나의 민족적 공동체아래 남과 북에 2개의 체제가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솔직하게 시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현실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그 토대위에서 상호화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감으로써 민족화합을 지향해 나가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선언을 통해 우리는 남북한관계를 독립된 국가간의 관계로 보지는 않고 그대신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한 민족공동체 안의 「특수관계」로 보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남북간의 교역을 국가간 교역이 아닌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하겠다는 데에 이러한 취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민족통일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7·7 특별선언』은 한 민족안의 두체제간

의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적극적인 교류·개방·협력을 통해서 사회·문화·경제부문에서 공동체로 통합해가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공동체까지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나라로 통일해 나간다는 통일이념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과 이념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럽공동체(EC)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역사와 문화·민족이 다른 나라들끼리 구성된 유럽공동체가 국경에 관계없이 사회·경제·문화교류를 통해 하나의 사회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로 통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보는데 있어서 인식의 전환만 뒤따른다면, 남북한간에도 사회·문화·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정치공동체를 만들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유럽공동체가 정치적 공동체를 지향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유럽공동체를 구성하는 나라들끼리 민족이 달라서 민족공동체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그와 정반대다. 우리민족은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그속에서 함께 삶을 누려왔고 어떠한 역경과 시련속에서도 민족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잃지 않고 민족본연의 모습을

지켜왔다. 오늘날 분단이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때문에 비록 다소 반목·불신·오해가 없지 않았지만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다시 만들어 낼 수 있는 「민족의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민족의 뿌리가 살아 있는 조건하에서는 사회·경제·문화공동체는 정치공동체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인식의 전환은 남북한을 사회·경제·문화공동체로 만드는 필요조건이 되는 것이며 민족의 뿌리는 그것을 정치공동체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런만큼 북한도 『7·7 특별선언』을 계기로 남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민족적 유대를 강화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함께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는 선의의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는데 호응해 나서야 할 것이다.

통일·외교정책 기조의 전환

『7·7 특별선언』은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견디다 못한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의 내부변화를 모색케 하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버린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대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

으로 참여하는데 협조하는 동시에 미·일 등 우리 우방들과의 관계개선까지도 지원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통일·외교정책 기조의 일대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북한이 서방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 주겠다는 이같은 적극적인 정책은 우리의 국력과 우리국민들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내부적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통일의 여건을 지금보다 좋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산물인 것이다.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라는 표현은 예나 지금이나 같지만 이제부터는 북한동포의 복지향상을 위해 그 발전을 돕고 민족애로서 해나가겠다는 의미가 『7·7 특별선언』을 계기로 첨가되었으며, 해외동포들의 자유로운 남북왕래,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친적상봉도 폐쇄적인 북한사회를 민족애적인 차원에서 개방시켜 보려는 취지로 다시 제의된 것이다.

북한이 서방국제사회 진출을 돕겠다는데는 북방정책을 통해 우리가 소련·중국 등 공산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을 의식한 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은 북한의 서방국제사회진출을 돕겠다는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가 아니다. 우리가 북방외교 추진성과를 북한의 대서방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삼지는 않고 있는

바, 북한이 서방국제사회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더이상 우리의 우월한 국력과 국제적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방국이 북한과 비군사적 물자교역을 하는데 반대하지 않겠다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이러한 자신감과 더불어 북한내부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아닌 다른나라의 힘을 빌릴 수도 있다는 대승적 자세에서 나온 것이다.

요컨대 『7·7 특별선언』은 외교면에서 기왕에 남북한이 벌였던 경쟁·소모외교를 끝내고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공동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동반자적 관계」에 서자는 것을 제의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우리의 대북포용자세가 두드러지는 또하나의 대목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변화를 토대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

『7·7 특별선언』이 발표되자 국내언론들은 “진일보한 대북정책”, “새로운 이념”, “대결시대의 청산”등의 표제를 달아 『7·7 특별선언』을 지지했다. 「폐쇄」된 북한사회를 「개방」으로, 「차단」된 남북한 관계를 「교류」로, 「대결」로 치달아온 상호관계를 「협력」으로 전화하여 「선의의 동반자」로 승화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7·7 특별선언』은 「남북한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능케 하

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미·일 등 우방국 정부와 주요 해외언론들도 “건설적이고 전향적이며 유연한 제안”, “또하나의 한국적 경이”로 평가하면서 「대결속의 대화」로부터 「동반자와의 대화」로의 발상의 전환을 중시하고 “한국대통령이 취한 대북제의중 가장 심도있는 것”이라는 표현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평가가 사실은 평면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사실상 『7·7 특별선언』에서 찾을 수 있는 인식과 발상의 전환은 중요한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진일보했고, 새로운 것이고, 대결시대를 청산하려는 것이고, 전향적인 것이고, 또하나의 한국적 경이인 것은 틀림없으나 『7·7 특별선언』의 깊은 뜻은 우리의 변화를 토대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자세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모든것이 변화하고 있다. 미·소관계가 냉전논리를 벗어나 협력의 차원으로 발전해가고 있고, 중·소관계도 변화하고 있다. 중국과 소련, 동구공산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을 토대로 서방국가들과 교류를 하고 있다. 우리와의 교류에도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유독 북한만은 이러한 변화를 외면하면서 폐쇄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의 남북한 관계는 미·소차원의 국제적인 해빙무드속에서도 서로 냉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70년대초의 국제적인 해빙무드속에서도, 잠시동안의 남북대화기간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꽁꽁 얼어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제 80년대 중반을 넘어서 후반으로 이어지는 화해와 협력과 개방과 교류의 무드를 타는 기회를 또다시 놓친다면 우리민족은 영원히 분열되고 낙후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이러한 추세를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도 도식적이고 교조적인 대남한 인식과 논리를 앞세워 북한 주민들을 괴롭히고 대남 적대의식을 고취하면서 동북아의 평화에 위협요인으로 남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그러한 입장을 고수하는 한 우리측으로서도 보장 없는 선제양보나 일방적인 변화를 위협시해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상대방이 변화하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통일여건조성의 기회로 삼기에는 분단의 세월이 반세기에 가까워 올만큼 너무 오래되었고, 그것에 비해서 주변정세의 변화는 너무도 급박하여 그러한 변화를 통일의 유리한 여건으로 조성하는데는 시간이 촉박할 만큼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이 획기적 자세와 입장의 변화를 먼저 취하고 그것을 토대로 상대방의

변화를 유도하는 길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7·7 특별선언』은 바로 이러한 인식의 소산인 것이다. 대북한 인식의 전환은 통일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목표와 상황을 연결시키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변화를 토대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인 것이다. 이것이 『7·7 특별선언』의 의의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2. 『7·7특별선언』의 후속 실천조치

『7·7 특별선언』은 남북한 관계와 북방정책에 새로운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 자존과 통일번영의 새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나가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선언의 형식으로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7·7 특별선언』의 기본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라면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기보다 아무런 조건없이 일방적으로라도 과감하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러한 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내적인 후속조치를 착실히 강구해 왔다. 이와함께 선언내용중에 북한측이 호응해 나와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7·7 특별선언』의 진의가 북한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가. 대내적 조치

전향적인 외교시책 선언과 해외동포들의 남북한 자유왕래를 위한 조치

1988년 7월16일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남북한관계를 민족공동체내에서의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7·7 특별선언』의 후속조치로서 앞으로 정부가 실천해 나갈 관련 외교시책을 밝혔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우리의 우방들이 자국의 법령과 정책에 따라 북한과 비군사적 물자를 교역하는 데 반대하지 아니함.
- 교역을 위하여 상담 등을 목적으로한 우리 우방과 북한간의 민간인의 왕래에 반대하지 아니함.
- 우리 우방이 북한에 민간상사의 지사 또는 지점을 설치하는데 반대하지 아니함.
- 북한이 유엔헌장의 정신과 원칙에 따라 세계평화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있도록 협력함.
- 북한과 소모적 경쟁, 대결외교를 지양함.
- 모든 국제기구, 국제회의를 포함한 외교무대에서 남북한은 민족공동체로서 중상이나 비방 등 비생산적 논쟁을 지양할 것을 북한에 촉구함.

- 북한이 유엔의 모든 산하기구와 전문기구, 정부간 지역 협력 및 개발기구 등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함.
- 남북대표가 함께 참가하는 모든 국제회의 및 행사에서 상호접촉과 대화를 갖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함
- 남북의 공관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국가에서 남북 외교관간의 접촉과 대화를 추진함.
- 우리의 우방이 북한과 문화, 예술, 학술,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갖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이에 협조할 용의가 있음.

아울러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450여만명의 해외동포들의 남북한 자유왕래를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해외에 생활근거를 둔 영주권소지자,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허가를 취득한 거주권 소지자에게 북한방문을 허용함.
-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 동포에게도 자유로운 모국방문을 보장함.
- 공산권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의 자유로운 모국방문을 보장함.
-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을 방문하는 해외동포들의 신변 안전 보장에 관하여 남북한 관계당국자간에 협의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함.

이상과 같은 외교시책 변화는 크게 보아 국제외교무대에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우방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도와주며 우리와 중국, 소련, 동구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면서 균형된 교차교류·접촉을 통해 남북한의 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남북한은 그동안 지나친 대결외교로 말미암아 국제사회에서 민족자존을 훼손시키고 물심양면의 낭비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소모적인 대결외교를 지양하는 대신에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성원이 될 수 있도록 밀어줌으로써 올림픽을 치른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높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동포들의 모국방문을 완전히 개방한 것은 우리의 신장된 국력을 감안할때 당연한 조치라 하겠으며, 중·소 등 공산권과의 관계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번 외교시책의 전환도 『7·7 특별선언』처럼 일방적으로 선언된 것이지만 이로 말미암아 남북한 관계가 민족공동체내에서의 동반자관계로 국제사회에서 가시화될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북한의 호응여하에 따라서는 그들 사회의 개방이 촉진되어 민족전체의 균형발전이 이루어

짐은 물론 한반도 주변정세도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로 바뀔으로써 통일의 문이 활짝 넓어질 것이다.

대북 비난방송 중지

정부는 남북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향해 공존공영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는 『7·7 특별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1988년 7월9일 0시를 기해 전방지역에서의 대북 비난방송을 전면 중지하는 한편, KBS 사회교육방송을 통한 대북방송에서도 북한측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지 않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동안 비난방송의 중지는 1972년에 발표된 『7·4 공동성명』 제 2 항 “신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중상하지 않으며”라는 조문에 의거하여 약 1년동안 실시된 바 있으나, 북한측의 일방적인 약속파기로 무산되어 버렸다.

이번 우리측의 일방적인 대북비난방송 중지조치는 『7·7 특별선언』에 따라 활성화된 북한자료의 개방 및 해외 동포들의 북한방문 등 대북접촉의 선행조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 민족이 계속 상호중상·비방하는 차원에 머물게 된다면 대외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였다고 하겠다.

북한은 아직까지 「정치·군사문제의 우선해결」을 주장하면서 대남모략, 비난방송을 계속하고 있지만, 실제로 비난방송과 같은 대결과 적대관계의 유산들을 먼저 정리하고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군사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예비적·절차적 과정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대북 비난방송 중지조치에서 더 나아가 「싸우지 말자」는 적극적인 평화메시지를 북한측에 전달하는 등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한 조치들을 아무런 조건없이 착실히 구현해 나갈 것이다.

남·월북작가의 해방전 문학작품 출판허용

문공부는 1988년 7월19일 남·월북작가 또는 재북작가의 해방전 문학작품에 대해서 상업출판을 허용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해금조치는 노태우 대통령이 『7·7 특별선언』에서 밝힌 「문화교류 개방」(1항)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분단상황 극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표명한 또 하나의 이정표이다.

이 조치로 인하여 우리는 월북작가 120여명의 해방전 문학작품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문학이 전성기를 이루었던 1920년대 이후 해방까지의 문학사적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작품이 금지도서로 된 것은 휴전직후인 1954년부터였으며, 이 당시 금지의 기준은 작품내용이 아니라, 작가의 소재에 있었다. 그동안 정부당국은 재북예술인들의 작품해금에 따른 사상적 혼란을 우려하였으나, 우리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등 내외여건의 성숙과 함께 『7·7 특별선언』의 기본정신을 문화적 차원에서 구현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과감히 개방한 것이다.

남북이산가족찾기 신청 접수

김상협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1988년 8월11일에 1천만 남북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제의(1971. 8.12) 17주년을 맞아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동 담화문을 통해 김상협 총재는 북적측에 중단된 남북적십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대한적십자사는 북녘땅에 있는 가족·친척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이산가족찾기 신청서 접수사업을 남북적십자회담 제의기념일인 8월12일부터 11월12일까지 3개월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총재는 이번의 이산가족찾기 신청접수사업은 장차 남북적십자사간의 합의에 따라 가족찾기사업이 전

개될 것에 대비하여 북적측에 보낼 이산가족찾기 의뢰서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김상협 총재의 담화발표에 이어 대한적십자사는 본사 및 각 시·도 지사에서 북한에 친족을 두고 있는 국민 혹은 해외동포들로 부터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접수받았는 바, 4,246건이 접수되었고 그 결과를 「심인의뢰서」로 작성하여 1989년 1월24일 북적측에 통보해 놓고 있다.

북한 및 공산권자료 공개

1988년 9월3일 정한모 문공부장관은 정부대변인 자격으로 “7·7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대북문화개방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북한 및 공산권 자료를 대폭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자료공개의 구체적 방침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북한 및 조총련 등 반국가단체가 선전목적으로 발행한 자료 등 명백히 국헌에 위배되는 자료를 제외한 일반 공산권 자료는 모두 공개하며
- 북한의 로동신문과 영상자료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공개하여 북한사회의 실상을 폭넓게 알 수 있게 하고

- 일반공개에서 제외된 자료라 할지라도 학술연구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열람·대출 등 이용절차를 간소화 하겠으며
- 정부기관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북한 및 공산권 정보자료를 각계에 최대한 공급토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 자료센터의 설치운영도 추진함.

이상과 같은 방침에 따라 그동안 「불온자료」라 하여 일반에 통제 되어 왔던 북한의 <로동신문> 등 북한간행물 일부가 일반인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고 북한에 관한 영상자료가 TV를 통해 보도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또한 북한 및 공산권자료 공개방침을 발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이용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국토통일원산하에 정부차원의 「종합자료센터」를 설치·운영토록 방침을 정하고, 그 설치를 위한 작업을 추진한 끝에 1989년 5월22일 서울에 『북한 및 공산권 정보·자료 센터』를 개설했다.

광화문우체국청사 6층에 자리잡은 『북한 및 공산권 정보·자료 센터』는 약300평 넓이에 북한간행 원전 및 각종 정기간행물, 공산각국 간행·출판물 및 공산각국의 동향 정보자료, 마르크스와 레닌의 전집 등 공산주의 원전

및 해설서 등을 비치해놓고 열람과 더불어 집필이 가능한 장소와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같은 일련의 과감한 자료공개조치는 대공산권 교류촉진 등에 따른 정보·자료수요의 증대에 부응하고 북방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북한 및 공산권 실상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정립에 기여함으로써 건전한 통일논의가 활성화되도록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

1988년 10월7일 나웅배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7·7 특별선언』에서 밝힌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한다”(제3항)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실천함과 아울러 남북간에 실질적인 경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대북한 경제개방조치를 발표하였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민간상사 북한물자 교역허용 : 우리측 민간상사나 국내 외국무역상사에 의해 간접교역형태로 군사물자를 제외한 남북물자의 국내로의 수입과 북한으로의 반출 및 이의 재반출입을 허용함.
- 민간상사 북한물자 중계허용 : 우리측 민간상사가 북한

-
- 의 물자를 제 3 국으로 수출하거나 제 3 국 물자의 대북한 수출을 중계하는 행위를 허용함.
- 북한원산지 표시, 상표 부착허용 : 북한의 원산지 표시나 상표가 부착된 북한물자의 국내반입시 원산지 표시 또는 상표를 제거하지 아니함.
 - 직 · 간접 교역물자 관세 비부과 : 간접무역에 의해 우리측으로 직접 인도되거나 단순히 제 3 국을 경유한 북한원산지 물자에 대해서는 내국간 거래로 간주하여 관세 기타 수입물자에만 부과되는 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우리측 물자의 대북 반출시에도 수출에 준하여 각종 수출관련제도를 인정함.
 - 남북경제인 상호접촉, 방문허용 : 우리측 민간상사가 제 3 국에서 상담을 목적으로 북측인사를 접촉하거나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며 북한경제인이 상담목적으로 방한을 희망할 경우 이를 환영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과 신변보장등을 약속함.
 - 북한선적 상용선박 입항허용 : 북한선적의 선박이 남북한 또는 제 3 국의 교역물자를 싣고 국내입항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함.
 - 남북경제교류 관련법제 보완 : 상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한 경제교류에 관련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며 이러한 법적 ·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남북한 간접교역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상의 특수지역 교역에 관한 제 규정등에 준하여 처리할 예정임.

『7·7 특별선언』을 경제적 측면에서 구체화한 「대북한 경제개방조치」는 동서간의 화해와 공영을 모색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 공산권과의 교류 증진에 맞추어, 남북간에도 경제를 통한 실질적인 접근을 도모함으로써 긴장완화와 통일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주도적 노력의 표현이다.

또한 이 조치는 남북한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남북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족공동번영을 도모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키는데 기여코자 하는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아울러 아직도 고립·폐쇄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을 개방의 광장으로 유도, 민족이 함께 잘사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1984년 1월 신병현 부총리의 제의를 북한측이 수락함으로써 1984년 11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열렸던 남북경제회담에서는 교역가능 품목으로 우리측이 철강재·섬유류·직물을 제의하였고, 북한측도 무연탄·철광석·명태·옥수수 등을 제시했으며, 경의선·철도연결을 위한 실무자 접촉까지 논의된 바 있었다. 그러나 1986년 1월 북한측이 「팀스피리트 '86」훈련을 구실로 삼아 그때까지 진행해 오던 각종 회담을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함에 따라 남북경제회담은 현재까지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측은 북한당국에 대해 다시한번 경제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으며, 특히 동회담이 재개되기 이전이라도 어떠한 형태(특히 간접교역)이든 남북한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우리가 일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 제시한 것이다. 특히 이 조치는 『7·7 특별선언』의 기본 정신을 최대한 반영하여 남북간 직접교역은 물론 간접교역에 대해서도 상당부분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하여 관세등을 부과하지 않고 교역에 관련된 각종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남북간 실질적인 경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사실 남북한간에 직접교역의 문호가 개방되기 위해서는 교역범위, 대금결제, 교역절차 등에 대해 남북한당국간에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이러한 제반 조건을 협의할 경제회담이 중단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총리가 발표한 「대북경제개방조치」는 남북한간에 협정이 없이도 실현 가능한 간접교역을 중심으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우리측이 취할 수 있는 일방적인 실천방안을 밝혔다고 하겠다. 정주영씨가 평양

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고 북한물자가 국내에 반입되고 판매되고 있는 것은 이와같은 일방적이지만 적극적인 우리측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향후 남북간에 이러한 간접교역이 추진되어 상호접촉이 증대되고 상호교류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남북한 직접교역실현을 위한 분위기와 기반을 성숙시킴으로써 남북경제교류가 본격화되고 남북간 긴장완화와 상호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앞으로 북한측의 보다 적극적인 호응이 없는 한 이 조치를 계기로 남북간의 경제교류가 당장 시행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지만, 경제문제에서는 이념이나 체제와는 상관없이 상호이익을 위해 접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북한측으로서도 경제난 타개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우리측 진의가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남·월북 작가의 음악·미술작품 규제해제

1988년 10월27일 정한모 문공부장관은 『7·7 특별선언』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발표된 남·월북 작가들의 순수한 음악·미술작품에 대해 일반공개를 허용할 방침임

을 발표하였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음악작품은 공연법, 음반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의거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연 및 음반제작을 허용하고, 미술작품은 별도의 절차없이 전시를 허용함.
- 이는 순수한 내용의 작품에 한하며 공산주의 체제를 찬양, 선전, 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된 작품에 대해서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님.

이 조치는 지난 1988년 7월19일 남·월북작가의 문학작품 출판허용에 이어 문화공동체 회복을 통해 통일을 앞당기려는 또 하나의 전향적인 조치로서, 이로서 『7.7특별선언』의 기본정신은 예술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이 조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상과 문화예술을 하나의 자로 재단하던 냉전구조의식을 탈피하여 세계속의 한국이라는 위상에 걸맞는 문화예술 창조를 지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단절된 우리의 예술사를 완전하게 복원시킴으로써 민족정서와 전통에 뿌리박은 문화예술을 창달, 민족예술의 정통성을 되찾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도 있다.

한국 현대예술이 대부분 해방이후 5~6년 사이에 태동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시기에 남·월북한 음악가

와 화가들의 사조와 창작태도는 우리 예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부문이라고 하겠다. 이와함께 7월19일의 문학작품 해금이 해방전 작품을 대상으로 한데 비해 이번 조치의 경우 정부수립까지로 시점을 내려잡은 것은 앞으로 남북한간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민족화해를 도모해 나가는데 있어 보다 전진적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하겠다.

각급학교 교과서의 북한관련 내용개편

『7.7특별선언』이 냉전시대의 대결논리를 털어버리고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남북한관계를 민족공동체내의 동반자관계로 바꾸어보겠다는 정책의지의 산물인 만큼, 이러한 의지와 비전을 구현해 나가는데 있어서 통일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짜여지는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7.7특별선언』의 취지와 정신을 교육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급학교 교과서중 북한관련 부분의 내용이 수정·보완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제5차 교육과정개편('87~'91)기간중에 이를 실천에 옮기기로 결정하고 1988년 7월부터 교과서내용 개편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1988년 10월27일 관련기관 및 각급학교 교

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교육방향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그 결과를 1988년 7월부터 시작된 「교과서 집필 방안작성」작업('88.12 완료)에 반영하였고 1989년 신학기부터는 새로 개발·작성된 「교사용 통일교육지침서」를 각급학교 교사 및 사회교육기관에 배포하여 교육 일선에서 활용토록하고 있다.

이러한 실험과 준비과정을 거쳐 확정될 교과서에서는 과거 북한의 잔학성, 호전성을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북 증오심과 적대감정을 심어줄 수 밖에 없던 부분이 대거 삭제되는 대신, 북한을 민족공동체내의 동반자로 인식하게 해 줄 수 있는 내용들로 바뀔 것이며, 남북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로 보완됨으로써 통일에 대한 비관론이나 무관심 대신 낙관론과 책임의식을 갖도록 할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도 및 장치 구비

1988년 10월7일 「대북경제협력조치」를 발표한 정부는 10월18일 「남북물자교역지침」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12월15일에는 「남북경제인 상호교류제도」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적인 조치나 제도만으로는 남북교

류협력을 위한 사실행위들이 현행 법체계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정부는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특별법」안을 성안하여 1989년 2월13일 개최된 제145회 임시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국가보안법과의 상호관계등의 이유로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채 계류중에 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1989년 3월31일 통일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차관들을 위원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태세를 정비해 놓고 있다.

한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국민들의 요구는 계속 높아만 감으로써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도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는 합당한 절차를 거쳐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교류·협력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잠정적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을 마련하였고 1989년 6월12일 이를 「대통령 특별지시」로 시행하였다.

나. 대북제의

적십자실무회담및 본회담 제의

1988년 7월13일 김상협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북한적십자회 손성필 위원장 앞으로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거듭 촉구하면서, 그 이전이라도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적십자 실무회담」을 갖고 제2차 고향방문단 교환실현 등 실무협의를만으로 가능한 4개항의 사업을 우선 추진하자고 다음과 같이 제의하였다.

- 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을 위한 신청서와 회보서 상호교환
- 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시 상봉가족 및 쌍방 적십자를 통해 생존·거주지가 확인된 이산가족간 서신교환 주선
- 해외거주 이산가족들에게 생사·주소확인, 서신왕래, 가족상봉의 기회 알선
- 금년중 제2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 등 사업 추진
- 이를 위해 남북적십자 실무회담을 7월30일내에 판문점에서 개최

-
- 북한측 이산가족이 친족상봉을 위해 우리측 지역의 방문을 원할 경우 신변 안전 보장과 함께 제반편의를 제공할 것임

그간의 남북적십자회담은 10차례의 본회담을 거치는 동안, 남북쌍방이 내놓은 합의서 형식과 내용상의 일부 차이점이 있기는 하였으나, 사업실시를 위한 방법등 기본 문제에 의견접근을 보였다는 점에서, 좀 더 노력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10차 회담(서울)에서 5개항 의제의 일괄 타결과 자유왕래에 대하여 원칙적인 합의를 이룩하였으며 다만 합의서 작성상 일부 의견차이로 완전한 타결에는 이르지 못하였을 뿐이다.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있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일천만이 넘는 남북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산가족문제를 위한 실무회담개최를 제의한 김상협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대북제의는 『7.7특별선언』의 기본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남북인적교류의 우선적 과제가 이산가족 문제임을 감안한 인도적·동포애적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의내용중 북측의 이산가족이 자기 혈육을 상봉하기 위해 우리측 지역의 방문을 원할 경우 신변안전 보

장은 물론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한 것은, 남북간의 대치와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조치라면 북한측의 호응이 없더라도 우리가 조건없이 취해 나간다는 포용적이며 전향적인 『7.7특별선언』의 입장을 다시한번 구체화한 것으로서, 북한의 반응에 따라서는 사실상 남북간 자유왕래의 첫발을 내딛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적 손성필 위원장은 1988년 7월16일 전통문을 통해 “남북적십자회담이 남측의 반공대결정책과 전쟁소동으로 중단되었다”면서 “적십자회담의 재개를 가로막는 제반요인들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한적 총재가 제기한 「남북적십자 실무회담 개최」제의를 사실상 거부하였다.

이처럼 반공태세 철폐, 군사문제우선해결을 내세워 적십자회담을 거부하던 북한측은 1989년 5월31일 북적의 손성필 위원장의 대남서신을 통해 문익환목사 입북시 논의되었음을 부각시키면서 제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을 제의해 왔다. 여기에 대해 한적은 북한이 문목사의 입북을 정당화하고 또 7월 평양집회를 앞두고 나온 전략적 고려임을 인식하면서도 6월 12일의 김상협총재의 대북서신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누차 제의해 온 제2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제외에 북한측이 호응해 온 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문제를 포함하여 제10차 본회담에서 합의된 의제 5개항의 이행을 위해서 제11차 남북 적십자 본회담을 1989년 7월11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남북교육당국회담 제의

1988년 7월15일 김영식 문교부장관은 북한 정무원 교육위원회 변영립 위원장에게 보내는 대북서한을 통해 남북학생교류를 위한 「남북교육당국회담」을 가능한 한 7월 30일 안에 판문점에서 개최하고 조국순례대행진 추진문제와 친선체육경기 교환 개최문제, 그밖의 학생교류추진과 관련된 문제들을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김 문교부장관은 조국순례단의 규모를 쌍방 각기 1,000명 정도로 하고, 우리측 학생들은 판문점에서 백두산으로, 북한측 학생들은 판문점에서 한라산으로 행진한 후 귀환하는 방식으로 하되, 올해안에 첫번 행진을 갖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또한 친선체육경기 교환개최는 우선 축구, 남녀탁구, 남녀배구 등 구기종목을 택해 쌍방 각기 200명 정도로 선수단을 구성, 1차경기는 1988년10월 평양에서 그리고 2차경기는 1989년4월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아울

러 제의했다.

이와함께 이같은 시범사업이 진전되면 남북학생들간에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문화예술분야에서 공연 및 전시회의 교환개최와 금강산, 경주 등 명승지와 민족사적지를 관광하는 「수학여행단」교환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남북한간에 쌓인 불신과 오해의 장벽을 제거하고 상호이해를 통해 민족화해를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한 각계각층 인사의 교류가 관건이며, 노태우 대통령이 『7.7특별선언』에서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1항으로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시기적으로 「남북교육당국회담」은 「6.10 남북학생회담」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이 또다시 「8.15 남북학생회담」을 강행하기 위해 구체적 행동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에서 제의되었다. 당시 학생들은 이산가족문제, 올림픽 공동 개최문제와 함께 정치·군사문제까지도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여론의 방향은 달랐다. 민족의 생존과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를 정부의 역할을 부정한 채 어느 집단이나 계층이 즉흥적 행

동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였고, 학생들이 신분에 맞지않는 의제를 놓고 북한과 직접 교섭에 나서는 것은 분단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이용당할 우려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학생들의 자세를 촉구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었다. 북한측이 당국간의 모든 대화를 거부하면서 「남북학생회담」주장에만 즉각적인 호응을 보이며 전 선전매체를 동원하여 우리 학생들의 정치적 투쟁을 고무·선동해 나선 점에서, 국민들은 4.19당시 혼란기를 겨냥한 북한측의 학생회담 선동을 상기했던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적 지지와 합의에 기초하고 남북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대북제외나 접촉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협조한다는 것을 일관된 입장에서 밝혀 왔다. 따라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청년·학생의 상호교류를 다각적인 인적교류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해 왔으며, 학생들의 통일외지와 열정이 정부의 교섭과 보장하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일부 학생들이 제기하고 있는 「남북학생회담」문제와 관련하여 1988년 6월8일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순수한 것이라면 정부도 이를 수용할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남북학생들의 국토종

주행진과 친선체육대회 개최를 남북당국간 보장하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1988년 6월9일 이홍구 국토통일원장관은 “북한당국이 남북학생 교류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남북고위당국자 회담을 열어 남북학생교류의 내용, 방법, 범위와 남북왕래절차, 신변안전보장, 각종편의제공 문제등을 우선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남북학생 교류를 속히 실현하기 위한 대북교섭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학생을 비롯한 각계와의 폭넓은 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문교부장관의 남북교육당국회담제의는 이같이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큰 흐름안에서 학생들의 교류가 정부의 주선과 교섭하에 추진됨으로써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뜻이 있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측이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김영식 문교부장관의 대북한서한을 7월15일 전달하겠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7월14일 정무원 교육위원회 변영립 위원장 명의로 우리측의 서한접수를 거부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

이 전화통지문에서 북한측은 우리정부가 「남북학생회

담」을 방해한다고 비난하고, “뒤늦게 당국이 끼어들어 주선이니 뭐니하고 간섭할 조건이 없다”며 서한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나섰다. 또한 북한측은 7월17일 다시 정무원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학생교류문제는 학생들 자신이 협의, 해결할 문제이지 당국이 개입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남북교육당국회담을 들고 나온 것은 학생교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8.15학생회담을 가로막고 정치적 위기를 수습하여 올림픽 단독개최를 강행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 우리측의 「남북교육당국회담」 제의를 정면으로 거부했던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남북교육당국회담」을 거부하면서 남북학생회담 실현을 위한 우리측 일부 학생들의 투쟁을 선동한 것은 학생들의 남북학생회담 개최강행과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봉쇄조치로 사회혼란이 조성되도록 함으로써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저지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학생회담을 둘러싼 학생들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 그릇된 환상과 기대를 갖고 이후 학생들의 반정부 투쟁선동을 가일층 강화하였으며, 8월15일 판문점 학생회담에서는 민주화 투쟁을 벌이다가 목숨을 잃은 학우들을 위한 추모제를 지내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교육당국회담」 제의를 포함한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과 1988년 8월4일 국회 통일정책특별위원회 주관하의 「남북학생회담 관련 공청회」 개최 등 학생을 비롯한 각계와의 폭넓은 대화추진, 그리고 대북접촉 창구는 정부로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적 여론에 의해 그같은 북한측의 기도는 봉쇄되었다.

남북정상회담 제의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8월15일 제43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김일성주석에게 6천만 동포의 염원에 따라 민족의 통합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만나 회담할 것”을 제의하였다.

특히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의 지도자가 서로 만나 민족의 장래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데 있어 장소, 의제, 절차 그 어느것도 장애요인이 될 수 없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모든 문제를 푸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지적한데 이어, “내외정세로 보나 우리의 민족적 현실로 보나 남북한 당국 최고 책임자의 만남은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되었으며, “나의 이러한 제의에 북한측이 호응해 옴으로써 민족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기

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국민 모두가 그동안 이룩한 성취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리고 세계의 축복속에 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룬 민족의 드높아질 자존을 바탕으로, 민주·번영·통일의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임기중에 남북한 관계개선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7.7특별선언』을 발표한 노태우 대통령 자신이 제의한 「남북정상회담」은 『7.7특별선언』의 기본정신을 스스로 실천하고 선도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민족자주적으로 열어 나가려는 구체적 포석이었다.

뿐만 아니라 1981년의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 제의가 남북상호간의 불신해소에 주안점이 주어지는데 비해 1988년 8월15일의 「남북정상회담」 제의는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는 『7.7특별선언』의 기본정신을 토대로 민족공동체 회복을 통해 통일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던 점이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남북문제와 관련한 그동안의 각종 제의를 검토해 볼 때 그 실현가능성보다는 대내외 선전에 치우친 감이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태우 대통령의 이날 제의의 배경에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실현가능성과 추

진의지가 깔려 있었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또한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중대하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정상들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고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올림픽을 앞둔시점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북한측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은 시기적으로나 또 남북관계 상황에 비추어 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우리측의 남북정상회담제의에 대해 북한측은 계속 침묵을 지키다가 그들의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을 하루 앞둔 9월8일 경축보고대회를 하는 자리에서 김일성이 남북정상회담에 관해 언급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자신이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공식반응을 보이며 <남북공존>이라는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통일국가의 연방정부를 세우거나 그 실현을 위한 평화통일위원회 같은 것을 창설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평양을 방문하는데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식의 전제조건을 내세우는 구태의연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김일성은 연설을 통해 “조선반도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과 남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국군대와 핵무기를 철거시키고 북과 남이 무력을 단계적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종전의 군사문제 우선해결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처럼 김일성은 고려연방제를 단일의제로 하고 주한 미군철수, 남북불가침선언 채택 등을 전제조건으로 한 남북정상회담을 역제의 했으나, 노태우 대통령이 먼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의제·장소·절차 등을 굳이 따지지 않기로 한 이상, 우리 정부는 북한측의 반응과 향후 동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신축성있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3. 새 통일방안 정립을 위한 노력

가. 새 통일방안 정립의 필요성 제기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민주화 노력과 더불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크게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는 활발하게 통일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한편 그동안 통일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소의 혼란도 없지 않았지만, 정부는 헌정질서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왔다. 이렇게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과 열망을 수렴하는 토대위에서 통일에의 실질적인 진전을 도모하고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지난 시대와는 분명히 다른 현상인 것이다.

정부는 이와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1988년 7월7일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통해 새 공화국의 남북관계 및 통일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적극 구현하기 위하여 후속실천조치들을 꾸준히 실행해 왔던 것이다. 6공화국이 기울여온 통일노력은 한마디로 북한

과의 적대·경쟁관계를 지양하고 북한이 하나의 민족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선의의 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인식을 공유하자는데 초점이 주어지고 있다. 남북이 비록 체제를 달리하고는 있지만 상호교류·협력을 추진해나가면서 민족의 삶의 원형인 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키는 노력을 통해 사회·문화·경제공동체와 정치공동체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인 통일을 실현하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남북관계인식과 통일과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체적으로 정책화할 필요성은 통일과 관련한 내외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하고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점을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10월4일 국정연설에서 이렇게 설파하였다.

이 세기에 들어와 힘없는 약소민족으로 남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동포형제가 총뿌리를 맞대고 피를 흘린 통한의 어두운 역사에 종언을 고하고, 이제 우리는 통일과 번영을 이루어 21세기, 세계의 중심국가로 뛰어 오르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 있습니다.....우리는 이제 민족 번영의 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지난 40년간 민족을 가르고 슬한 고통과 비극을 주어진 남북분단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6천만 우리 민족의 운명은 더이상 외세와 타율에 의해 결정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국제정세의 변화에 슬기롭

게 대응하고 통일환경을 자주적으로 개척하여 민족통일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입니다.

저는 저의 임기중 40년간 얼어붙은 남북간에 화해의 봄이 오게 할 것입니다. 남북이 서로 오가며, 교통·교역하고 협력하여 민족공동체로서 서로 신뢰하는 바탕을 이룩할 것입니다.

통일과 관련한 내외정세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화하는 정세에 부응하면서 민족통일국가를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 모두의 열원을 실현할 새로운 통일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분단된 민족의 소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 공화국의 통일방안을 가까운 시일안에 국민여러분께 제시하려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민족 모두가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동시에 민족공동체가 영원히 번영·발전할 통일국가를 이룩하는 데 있습니다.

민족통일의 방안은 편협한 냉전논리나 어느 일방에 선 주장에서 벗어나 그것을 받아들여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내부의 다양한 통일 논의는 물론 북한측에서 제시해온 방안중에서도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민족 모두가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통일국가를 완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남북간의 긴장과 대결의 근원이 되어온 불신을 해소하고 우선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상부상조하고 함께 번영하는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노태우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새 통일방안 제시의 당위성과 함께 그 정립방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포용성과 실현가능성을 제일 중요한 요건으로 확인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우리 내부의 다양한 통일논의 뿐만 아니라 북한측에서 제시해온 방안중에서도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은 편협한 냉전논리나 어느 일방의 주장만에 근거한 통일방안은 우선 북한측을 포용할 수 없고 따라서 결국 실효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 통일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한 이면에는 정부가 통일논의의 장을 활짝 개방하여 국민여론을 광범하게 수렴·반영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작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남북한교류·협력시대를 내다보고 의연한 입장에서 민족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사회 내부에서부터라도 마련해 보자는 전향적인 자세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지와 판단의 소산으로 모습을 드러낼 새 통일방안은 여야를 포함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뒷받침됨으로써 남북한관계에 돌파구를 여는 민족통일의 새 장전이 될 것이다.

나.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활동

여야를 포함한 국민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여 새로운 통일방안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통일원은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우선 통일원장관이 직접 나서서 각계인사들과 간담회·대담형식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만 해도 205회 1,534명에 이르며, 실무책임부서에서 주관한 간담회는 국내인사간담회가 15회 113명, 해외교민 간담회가 9회 475명에 이른다. 16회에 걸친 전문가 세미나에는 138명이 참가하였다. 설문조사방식의 의견조사는 국내외 각계각층 17,265명을 대상으로 하여 6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간담회·세미나·설문조사 방법 이외에 통일논의를 취합·수렴하기 위해서 각정당과 민간단체, 재야인사들의 주장은 물론 학생들의 주장에 이르기까지 426건에 걸쳐 그 논조와 내용을 분석·정리하였다.

새 통일방안 정립을 위한 국민여론수렴과정과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간담회

구분	실시기간	횟수	인원	분야	비고
각계인사와의 대담	88.6.1 -12.31	205	1,534	학계, 언론계, 종교계, 정계등	
각계인사 초청 간담회	88.10.21 -12.26	15	113	경제계, 교육계, 법조계, 종교계, 노동계, 여성계, 문화예술계, 대학생등	
교민방문 간담회	88.11.24 -12.13	9	475	교민지도층인사, 종교인, 주재언론인, 주재상사원등	일본, 미국, 캐나다의 6개도시
	계	229회	2,122명		

세미나

구분	실시기간	횟수	인원	분야	비고
지방도시 순회세미나	88.10.29 -11.12	10	96	학계, 언론계, 사회계등	대구, 전주, 제주, 춘천, 대전, 부산, 광주, 마산, 인천, 강릉
통일문제 전문가워크숍	88.11.8 -12.20	6	42	학계, 언론계, 종교계등	
	계	16회	138명		

설문조사

구분	실시기간	인원	비고
직능별 여론지도급인사	88.6.25-7.15	3,000	대학생 포함
만20세이상 서울시민(남, 녀)	88.10.17-10.24	800	한국개발연구소 위촉
민족통일협의회 회원	88.10.18-11.5	700	
민주통일정책자문위원	88.9.16-12.6	9,198	1차 : 7,198명 2차 : 2,000명
통일연수대상자	88.10.28-12.22	2,939	
해외교민	88.11-12.	628	아주, 구주, 미주 지역
계	6회	17,265명	

논의·논조분석·정리

대상	분석범위	건수	비고
각계의 통일논의	87.9.1-88.10.31 기간중 자료	77	정당의 정강정책, 정당대표연설, 재야인사 및 민간단체의 발표문등
일간지(7개)의 논의	88.3.1-10.31 기간중 자료	326	사설, 기획기사, 해설기사 등
비정부차원의 대북접촉, 교류 제안	88.3.1-10.31 기간중 자료	23	개별인사, 민간단체, 학생단체등
계		426건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각계·각층의 여론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통일문제만큼 상당수의 재야인사들과 운동권 학생들까지 호응해옴으로써

정부와 국민간에 폭넓은 대화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통일방안의 국민적 합의기반이 견고하리라는 것들에 견케 해준다고 하겠다.

다. 여론의 방향과 방안의 골격

새로운 통일방안을 정립하기 위한 일련의 국민여론 수렴과정에서 표출된 논의의 내용과 방향들은 다양했다. 북한의 고려연방제를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았다. 미군철수후 북한과 1대1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 중립화만이 통일의 방도라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대한민국의 법통을 훼손시키지 않는 전제하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라는 기초위에서 통일이 추구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대의정치에 따라 남북한을 망라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데에 절대적으로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타당성이 있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통일방안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중간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통일의 중간단계가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그런점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분명한 의지가

표출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중간단계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들이 있다. 즉 국가연합과 연방제의 중간형태같은 것을 통일에 이르는 잠정적 중간단계 형태로써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 여론수렴과정에서 표출된 아이디어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개념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아닌 체제공존 및 협력의 개념에 입각한 민족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민족공동체는 민족내부적으로는 남북한간의 관계를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규정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2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을 동시에 포용·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통일방안의 초안을 성안하여 최종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바, 가까운 시일내에 국회 공청회를 거쳐 새로운 통일방안이 제시될 것이며, 그것은 성숙한 단계에 이른 우리의 정치·경제·사회적 발전단계와 주변정세의 변화양상을 충분히 반영한 실현성 높은 방안으로 평가될 것이다.

부 록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 특별선언』(노태우 대통령, 1988.7.7)

『한반도에 화해와 통일을 여는 길』
(노태우 대통령 유엔총회연설, 1988.10.18)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 특별선언』
(노태우 대통령, 1988. 7.7)

친애하는 6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은거례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새 공화국의 정책을 밝히려 합니다.

우리 민족이 남북분단의 고통을 겪어온지 반세기가 가까와 옵니다.

분단의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숭한 시련과 고난을 주었으며, 민족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남북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번영된 통일조국을 여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겨레 모두에게 맡겨진 민족사의 소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이한 이념과 체제로 분단된 남북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루었으며,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 그날부터 오늘까지 서로가 서로를 불신·비방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고통스런 분단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나 민족통합은 우리의 책임아래 우리의 자주적 역량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밝은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

다. 이제는 민족전체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전쟁의 위험과 대결의 긴장이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역사적인 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가 아직 비극적인 분단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과 북이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을 등진채 서로를 대결의 상대로 여겨 적대관계를 격화시켜 온데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며 겨레의 힘과 슬기를 모아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빛나는 역사와 문화전통을 창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번영된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 일 것입니다.

이 길이 곧 민족자존의 길이며 민족통합의 길입니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적 유대를 강화해 나갈 적극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결의 관계를 지양해야 합니다.

북한이 책임있는 성원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그것이 북한사회의 개방과 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남북은 상호간에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민족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6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내외에 선언합니다.

1.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등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2.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간에 생사·주소확인, 서신거래, 상호방문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지원한다.
3.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한다.
4.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여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5.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6.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일본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

나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조치에 대해 북한측도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북한측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 온다면 보다 진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아울러 밝혀드립니다.

나는 오늘의 이 선언이 통일을 향한 남북간의 관계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6천만 우리 겨레 모두가 슬기와 힘을 모은다면, 이 세기가 가기 전에 남과 북은 하나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로 통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우리는 머지 않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반도에 화해와 통일을 여는길』
(노태우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1988. 10. 18)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존경하는 각국대표 여러분,

43년전인 1945년 바로 이때쯤 2차대전의 종전을 맞은 세계는 새로운 희망속에 국제평화 질서를 담당할 유엔의 탄생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종전은 우리 민족에게 외세에 의한 식민통치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수천년간 지켜온 나라를 되찾는 벅찬 환희와 희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은 잠시 한 때였을 뿐, 어느 날 아침 그것은 국토분단의 슬픔으로 표변하였습니다.

종전의 처리과정에서 항복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강대국들의 편의에 따라 북위 38도 지도상에 한반도의 중간을 자르는 분단의 선이 그어졌습니다.

한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이 결정은 우리 겨레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분단은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을 가르는 높고 험한 장벽이 되었으며 한반도를 냉전의 거센 폭풍속에 몰아 넣었습니다.

1950년 6월 어느 평온한 일요일 아침, 침략에 의한 전쟁이 발발하여 나라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3년여에 걸친 이 전쟁에서 이념을 사이에 두고 20개국의 무수한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싸웠고 300만이 넘는 생명이 살상되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학생의 제복을 입고 지원병으로 전선에 나섰던 나는 술한 젊은이와 무고한 사람들이 전화속에 피흘리며 숨져가는 것을 보며 평화와 화해를 갈구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는 이 분단과 대결은 어떠한 노력으로라도 종식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1953년 7월 포화를 멈추었으나, 그 결과는 평화도 아닌 휴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남북단절과 대결의 긴장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대의 조류가 스쳐가도 한반도의 긴장은 얼어붙은 동토와 같았습니다.

한국 휴전선상의 시계는 1953년 이후 정지한 채로 서 있어온 것입니다.

한반도내의 무력분쟁은 언제라도 세계를 전화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각박한 상황으로 인간적으로 치루어야 했던 대가 또한 형언할 수 없습니다.

분단과 전쟁으로 부모, 남편, 처자와 헤어져 남북으로 갈라진 수백만 국민들은 한 세대가 넘도록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화도 교환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동포들간 가슴속의 한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절실한 현실을 타개할 길은 과연 없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한반도에도 화해와 평화의 따뜻한 봄이 오게 해야 합니다.

나는 이번 유엔 총회가 「한반도에서의 평화·화해·대화의 촉진」이라는 시의적절한 의제를 택한 것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환영합니다.

의장, 나는 귀하가 이번 총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며, 이번 총회가 알찬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의장, 오늘의 세계에는 개방과 화해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전후체제의 기초가 되어온 냉전적 갈등을 인류의 이성과 양식이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결에서 공존으로, 반목에서 화해로 인류의 기대는 전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희망의 징후를 이 자리 모든 분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8년을 지속해 온 이란·이라크 전쟁이 하비에르 페레스 데 꾸에야르 사무총장의 훌륭한 통찰력과 지도력에 힘입은 유엔의 중재노력으로 종식되고 있는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은 온 세계 모든 인류가 이 평화의 전당에 대해 큰 신뢰와 기대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이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것도 이를 말해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캄푸치아, 나미비아, 서부사하라에서도 평화를 위한 진일보의 조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간의 미소정상회담의 결과 인류를 파멸시킬지도 모를 공포의 전쟁요소를 감축해가는 실천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은 평화를 향해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장, 나는 바로 2주일전 막을 내린 서울올림픽의 「화합과 전진」의 정신을 그대로 가슴에 간직한 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24회 올림픽대회는 12년만에 동서, 남북의 세계가 한자리에 모이고 160개국의 젊은이들이 이념과 체제,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 한마당을 이룬 인류화합의 대축제였습니다.

올림픽사상 최대의 이 축제는 평화와 화해가 마침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낙관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루었고 아직도 분쟁의 위험이 있는 땅에서 가장 훌륭한 평화의 축전이 열린 것은 역사의 극적인 반전이며 우리에게 벅찬 희망을 안겨 줍니다.

그것은 평화와 공영에 대한 인류 염원에서 우러나오는 세계의 새 흐름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인류의 축전을 안전한 최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참여

하고 지원해준 세계 모든 나라 국민에게 감사드립니다.

제24회 올림픽대회는 불과 한 세대전, 전쟁의 폐허에서 가난과 굶주림에 떨던 한 민족이 시련을 딛고 피땀어린 노력으로 일어서 이룩한 발전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크나큰 긍지를 느끼며, 한국민의 성취가 인류 화합의 물결을 고조시키는데 이바지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세계 모든 개발도상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더해주는 사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불과 30년전 남의 나라에 의존하던 빈곤한 농업국가가 신흥산업 국가로 발돋움 한 데에는 부지런한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성취의욕이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불가양한 권리와 타고난 창의, 그리고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개방사회와 자유경쟁체제의 이점은 이러한 발전을 이끄는 힘찬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국제무역을 통하여 우리의 빠른 성장이 가능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무역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무역의 신장은 우리나라는 물론 교역상대국의 고용과 소득을 향상시켜 상호의 번영을 촉진해 왔습니다.

세계는 우리에게 분단과 전쟁의 시련을 주었으나 동시에 우리에게 발전과 성장을 위한 도움도 주었습니다.

이렇듯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는 인류가 당면한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해와 평화, 번영을 향해 전진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세계에 진보를, 그리고 인류에게 희망을 약속하는 것은 개방과 교류, 협력과 이해를 촉진하는 길 이외 또 다른 묘방이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폐쇄와 대립, 적대관계와 분쟁은 우리에게 하나뿐인 이 지구촌 어디에서나 재앙과 고통을 가중시켜줄 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개방과 협력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룩한 한국은 이제 민주주의와 번영, 통일을 열어나가는 드높은 자신과 낙관속에 21세기를 맞으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억압없는 자유를 누리며 각부문이 자율을 향유케 함으로써 개개인과 사회 구석구석마다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힘은 우리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여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의장, 오늘날의 세계는 한 시대의 매듭을 짓는 중요한 전환점에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변하는 것은 변화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유엔이 대결과 분쟁을 해소하는 새로운 화해의 장이 되고 있음을 스스로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냉전체제의 마지막 유산으로 남아온 한반도에서도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쟁이 빚은 불신이 남북한간의 대결을 낳았습니다.

휴전후 지난 35년간 엄청난 군사력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맞서 왔습니다.

이 대결의 구조를 종식시키는 것은 서로를 가르는 벽을 허물어 서로 개방하고 교류, 협력하여 믿음을 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지난 7월7일 이것을 공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나는 남북한간에 서로가 서로를 불신, 비방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모든 대결의 관계를 지양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나는 남북한이 한 민족으로서 번영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진전시켜나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이 선언을 통해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간의 통신조차 두절된 수백만 이산가족간의 만남은 물론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와 자유로운 왕래를 제의했습니다.

나는 남북한간의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우리의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나아가 민족전체의 번영을 위해 남북한간에 끊어진 도로와 길을 연결하고, 서로가 가진 인력·기술·자본을 동원하여 공장을 함께 짓고 국토를 함께 개발하는 관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나는 북한이 당장 문을 열고 개방을 실시하면서, 통일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상징사업으로 휴전선안 비무장지대안에 「평화시」를 건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화시」안에서 30년 이상 헤어졌던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자

유로이 만나며, 민족문화관, 학술교류센터, 상품교역장등을 설치하여 폭넓은 교환, 교류, 교역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선언에서, 우리는 대외적으로도 대결의 관계를 지양할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이 책임있는 성원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그것이 북한동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를 희망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은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민족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가야 합니다.

나는 우리의 우방국가들이 북한과 관계를 증진하여 북한의 개방과 발전에 기여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과 가까운 사회주의 국가들이 우리와 우호 친선관계를 증진해 가더라도 북한과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과 더욱 협력해 나가기 바랍니다.

남북한이 서로를 존중하며 변명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결코 우리들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이것은 민족통합을 위해 신뢰를 심는 불가결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정착될 때 남북쌍방은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 나는 지난 8월 광복절에 즈음하여 북한의 김일성 주석에게 직접 만나 회담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분단 이래 남북한은 평화와 통일방안에 관하여 상이한 수많은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남북의 최고책임자가 아무 전제조건없이 직

접 만나서 쌍방의 견해와 입장을 털어놓고 논의함으로써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한 타협의 실마리를 찾는데 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제도화하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창출하기 위한 공동의 토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일성 주석이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관해 반응을 보이는데 대하여 주목하면서, 나는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평양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간의 기본적인 상호신뢰와 안전보장의 틀을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불가침 또는 무력불사용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선언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난 30여년간 군사적 대결을 지속하여 온 남북한간의 관계를 상호신뢰와 공존공영의 관계로 대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틀이 설정되어야 하며, 또한 이는 남북 최고책임자간에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남북간의 불가침선언이 있기 전이라도 북에 대하여 먼저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남북한은 오늘날과 같은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정된 평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와 통일실현 방안, 남북간의 교류협력, 군비축소 등 군사문제를 포함한 쌍방이 제기 하는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구체적 방안도 회담에서 강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 남북한간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결구조로 인하여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반도에 안정된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화해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서울과 평양이 한반도의 평화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국들과 더욱 합리적이며 정상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앞으로도 계속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긴밀한 협의와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한국은 과거에 이념적 차이로 인하여 상호관계가 소원하였던 중국, 소련 그리고 동유럽의 여러나라들과도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상호존중과 평등의 원칙위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번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호 대화와 이해의 통로를 통해 분쟁의 요인을 해결하며 국민간의 우의와 협력을 넓혀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나는 지난 몇개월에 걸쳐 중국과 소련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우리와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에 전진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고무적 현상으로 평가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와 오랜 이웃인 중국이 반세기에 걸친 단절의 벽을 넘어 교류와 협력관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한·소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최근 상호협력관계가 계속 확대심화되어온 많은 제3세계의 비동맹국가들과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유대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개발도상국가와는 우리의 성장, 개발의 경험과 기술을 기꺼이 나눌 것이며 우리의 힘이 자라는데 까지 최선의 협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3세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면 같은 발전과정을 걷고 있는 우리의 보람일 것입니다.

의장, 이제 태평양지역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생동력과 발전에의 의지, 국제간의 협력강화로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랜 동양문화의 요람이며 태평양지역의 한 중심인 동북아시아는 지난1세기를 통하여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부터 태평양전쟁, 그리고 한국전쟁과 오늘의 긴장에 이르기까지 세계평화의 시금석이 되어 왔습니다.

나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없이 세계의 평화가 없으며, 이 지역국가

간의 협력 없이 태평양 번영의 시대는 열릴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동북아에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의 공고한 바탕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 남북한으로 동북아 평화협의회의를 열 것을 제의합니다.

이 회의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이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모든 문제를 폭넓게 다루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물론 이들 관계국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데에는 이념과 체제, 입장의 차이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광대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불가분의 동반자임을 직시한다면 그러한 난관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상의 현실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유익한 국제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의장, 이제 21세기를 눈앞에 내다보면서 인류역사의 한 장이 종결되고 새로운 장이 열리려는 것을 느낍니다.

확실히 지구촌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념보다는 이성과 지혜가 이끄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또다시 세계적 분쟁의 암흑속으로 곤두박질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개방과 협력, 평화를 제쳐놓으면 인류에게 이것을 막을 별다른 선택이 없어집니다.

나는 평화와 발전을 위한 협력이 인류활동의 주류를 형성하는 새

역사를 바라봅니다.

한반도에도 긴장과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한민족이 형제애로 화합하는 선율이 인류의 심금을 울릴 때가 올것입니다.

나는 5천년 역사상 남을 침략하지 않은 우리민족에게 시련이 그치고 평화와 통일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한반도에서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드는 날, 세계에는 확실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남북의 6천만겨레와 함께 민족적 대화합을 이룩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세대의 엄숙한 사명이며, 새로 자라나는 세대의 꿈이나 정열인 것입니다.

합치된 노력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분쟁과 빈곤이 지배했던 땅에서 가장 훌륭한 올림픽이 열렸듯이 한반도에 분단의 벽이 허물어지고 화해가 넘치는 날은 멀지 않아 올 것입니다.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끝으로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서울올림픽 주제가가 노래하고 있는대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겨레의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훌륭한 통일국가를 만들어서 인류의 복리에 기여함으로써 이에 보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7.7특별선언』 1년 통일정책보고

1989년 7월 1일 인쇄

1989년 7월 7일 발행

발행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전화 720-2425

인쇄 **정문사문화(주)**
전화 734-2236~9

국통조 89-6-50

〈비매품〉